

# 자칫하면 차량 바다 추락 '위험한 선착장'

여름 휴가철 앞두고 전남지역 항구 가보니

펜스·경계석 등 안전장치 제대로 없어...3년간 사고 59건이나 야간에는 더 위험...가드레일 설치 민원 목살 사망사고 발생도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방문한 여수 시 금오도 직포항은 항구로 진입하는 차량들과 주차 차량들이 뒤섞여 위태로운 모습이었다.

많은 차량들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착장에는 차량의 바다 추락 등을 막기 위한 경계석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차량이 주차된 선착장과 바다의 높이는 4m에 달했다.

아내와 함께 캠핑을 왔다는 배병직(67·경기도 시흥시)씨는 "직포는 조용하고 아름다워 자주 찾는 곳이지만, 안전펜스나 경계석 등 추락방지 시설이 부족해 야간에 휴대용 전등이 없으면 움직이기 겁이 난다"고 말했다.

는 관광객이 전남을 찾고 있지만, 도내 항구들의 안전시설은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2일 서해해경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바닷가 차량 추락사고는 2016년 16건, 2017년 25건, 2018년 18건으로 총 59건이 달했다. 사망자도 2016년 4명, 2017년 7명, 2018년 10명 등 총 21명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실제 여수시 금오도 남면 직포항에서는 지난해 12월 31일 밤 11시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모(여·

48)씨가 숨졌다.

이 사고는 남편 박모(50)씨가 보험금을 타내려 사고로 위장해 부인을 바다에 빠뜨린 사건이었지만, 박씨가 사전 답사를 통해 직포항을 추락장소로 선택한 것은 안전시설물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6개월여가 지난지만 직포항은 여전히 차량 추락사고를 막을 수 있는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다.

완도 사동항에서는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를 묵살해 사망사고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 완도 사동항 인근 제방도로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윤모(80)씨가 돌던 경운기가 추락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해당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행정당국에 제방도로 양쪽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묵살됐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전남도 관계자는 "각 항구마다 관리주체가 다른 탓에 도에서 모든 항구의 안전시설을 관리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추락사가 자주 발생하는 비법정어항의 경우 마을 어촌계 등이 관리주체이므로 안전설비가 타 항구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지역 항구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법정어항 214곳(국가어항 32항·지방어항 88항·어촌정주어항 94항)과 어촌마을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법정어항 883항 등 1097곳에 이른다.

/글·사진 여수=김민석 기자 mskim@



지난달 28일 여수시 남면 금오도 직포항에서 차량 한 대가 위태롭게 진입하고 있다.

## 영산강환경청, 정전사고 광양제철 조사 착수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정전사고로 1시간여 동안 검은 연기를 내뿜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광주일보 2019년 7월 2일자 6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정전으로 코크스(석탄) 공장에 설치된 안전밸브가 열리면서 내부 대기오염물질이 여과 없이 유출됐을 가능성과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유독물질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거쳐 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정전사고 당시 광양제철소는 코크스(석탄) 공장고 고로 등의 전기 공급이 끊기면서 잔류 가스가 배출되지 못해 내부 압력이 높아져 가시 배출관(압력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관)을 통해 가스를 배출했다.

비상시에만 작동하도록 돼 있는 가시

배출관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일부 가스가 여과되지 않고 유출됐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광양제철소측은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영산강환경청은 광양제철소로부터 사고원인과 가스 발생량 등 보고서를 받아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만녹색연합·광양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는 서둘러 대기 중에 방출된 오염물질의 정확한 성분조사와 주민, 노동자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가스 배출 경로를 확인하고 각 공정의 저감조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치매환자 폭행 혐의 전 시립요양병원장 항소심도 무죄

80대 치매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2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A씨와 의료재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입원 병동 CC-TV 기록을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는 요양병원 직원 B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같이 피해자의

상해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원장 A씨가 피해자를 보호실로 데려간 이후 결막 출혈이 발생했고 A씨도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확신을 줄 수 있는 증거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석연치 않은 면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7월 입원 중인 80대 치매 환자인 C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왜 천천히 가" 오토바이 탄 노인 폭행한 10대 입건

전북 익산경찰은 "노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A(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8일 오후 6시께 익산시 평화동의 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B(71)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적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군을 붙잡았다.

경찰조사결과, 택시에 승객으로 타고 터미널로 향하던 A군은 앞서가던 B씨가 오토바이를 천천히 몰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 박유천 징역 10월에 징유 2년... "봉사하며 살겠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씨가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두홍)은 2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내렸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2개월 넘게 구속돼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해 재사회화를 통한 단약(斷藥)의 기

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지난 4월 말 이후 두 달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박씨는 일단 자유의 몸이 됐다.

재판이 끝난 뒤 석방된 박씨는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앞으로 사회에 많이 봉사하면서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겠다"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현재 "본인 진료하려는 의료진 방해한 환자 처벌은 합헌"

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응급진료 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A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2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응급의료법 12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등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A씨는 2015년 12월 응급진료센터에

서 진료를 받던 중 응급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을 진료하려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고, 법원도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현재는 "응급환자 본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서 응급진료 방해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정당한 자기결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고 처벌 한다고 해서 자기결정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 · 설계 · 시공**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가) 기준치 5.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공동협력 체결을 통해 전면적인 규제 정비 개시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시남에 예산공역 등 대규모 프로젝트(4.3조원) 추진 가력함에 노력

**전국 지사·대리점·영업자 모집**

대표전화 1577-8963

전남지사 010-6838-3366

산재생에너지 전문기업

**(주)성광에너지**

주소 | 순천시 중랑로 317 2층

전화 | ☎061-752-7000 Fax | 061-751-6000

총괄본부장 | 010-9896-9754